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최경식 편집인 조요셉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권두언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교통질서 확립부터

경찰청장 이성한

연구특집

경찰의 『고객의 소리(VOC)』 체계적 구축방안
탈북자 사회일탈 유형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백병성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관 김운영

북한의 강성대국 추진에 대응한 보안경찰의 강화방안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 방안
경찰중간관리자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송경호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김지선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이춘삼

치안현장탐구

이 땅에 굳게 서다

경찰청 인권센터 경위 이준형

치안정책동향

경찰청과 경찰학 전공 대학생들의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상진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연구소 소개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교통질서 확립부터



경찰청장 이 성 한

일 선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지역치안 문제를 듣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교통시설, 교통 단속 등 교통 관련 질문으로 매번 교통문제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어찌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교통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통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다. 아직도 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많은 사람이 “먹고살기 힘든데 경찰이 못살게 군다”거나 “별것도 아닌데 봐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부주의가 참혹한 결과로 나타난 사고현장을 접할 때마다 결코 사소한 위반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다.

한 해 교통사고로 5000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이로 인한 손실비용만 13조 원, 여기에 교통 무질서로 인한 교통혼잡비용 27조 원까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도로 위에 버려지고 있다.

경찰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초부터 교통질서 확립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상습 정체 교차로에 캠코더 전담반을 투입하는 등 경찰력을 집중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암체·위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누구나 공감하며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 교통규제가 될 수 있도록 심야시간 점멸신호 확대, 좌회전·U턴 허용 장소 확대 등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있다.

교통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 국민의 참여에 달려 있다. 경찰관이 보이면 지키고 보이지 않으면 교통법규쯤은 위반해도 괜찮다는 법 경시풍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다. 착한운전을 서약하고 실천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서약자가 벌써 254만 명을 넘어서 국민 참여 캠페인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간의 노력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 교통사망 사고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7.4%)하고 정지선 준수율도 상반기보다 높게(5.6%) 나타나는 등 차츰 교통질서 존중 문화가 조성되고 있어 희망적이다.

교통법규는 생명과 직결되는 법이기에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이 정착돼야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운전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PSI](#)

※동아일보, 2013년 11월 19일자 기고문 인용.

경찰의 『고객의 소리(VOC)』 체계적 구축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선임연구관 백병성

서론

그동안 경찰은 민원사무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우리는 민원(民願)은 국민의 불만소리 또는 듣기 싫은 소리 정도로 인식해 온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고객의 소리”는 국민이 경찰서비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는 경찰서비스 질적 개선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하소연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소리에 귀를 열어 듣고 필요한 내용은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이 경찰에게 제기하는 불만, 문의, 제안, 요구 등이 현장에서만 듣고 사장되지 않도록,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찰서민원실, 「182콜센터」, 그리고 경찰서의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포함)’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고객의 소리」를 담고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했다. 경찰의 ‘고객의 소리(VOC)’ 체계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에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공공조직이나 민간기업의 선진된 VOC 운영현황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했다. 여기에서는 국세청과 롯데백화점 등 6개의 공·사조직을 대상으로 했고 이들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관련자와의 면담 및 현장 확인의 과정을 거쳤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487명을 대상으로 ‘고객의 소리’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내부적으로 경찰의 고객의 소리(VOC)에 관한 체계적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찰서과 지방경찰청 민원실, 그리고 경찰청 콜센터를 방문하여 실무자와 수차례 면담과 토론을 거쳤으며, 경찰청 실무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쳤음을 밝힌다.

연구내용

‘고객의 소리’에 관한 인식이나 시스템의 구축을 단계적으로 도입기, 확장기, 발전기, 중흥기로 분류 한다면, 2013년 현재 경찰의 ‘고객의 소리’운영수준은 외부기관과 비교했을 때 ‘도입초기’정도라고 진단할 수 있다.

경찰청의 『고객의 소리』 운영상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2콜센터』는 월평균 30만 건의 전화상담에 응대하고, 이중 약 72%는 상담원이 답변을 완료함으로써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콜센터이용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182콜센터』 민원신고로 접수된 자료 중 고객의 소리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기능이 미흡한 편이다. 즉, 법규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경찰서비스가 적절하지 못했거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내용 등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검토나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을 통한 고객의 소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경찰서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그리고 ‘전자민원’ 방식을 통해 청취하고 있는데, 그 중 ‘전자민원’은 민원인이 경찰청(서)의 홈페이지에 민원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서버로 연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경찰에 관한 각종 민원 중 경찰서비스 개선 요구(요청)내용은 ‘고객의 소리’로서 관리되고 나아가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서 민원실과 해당과에서 처리되는 민원은 인·허가, 증명, 확인, 탄원, 고소·고발, 질의, 건의, 신청 등이 있는데,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경찰민원실에서는 총 1,840,269건의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다. 이 중 약 2~4%에 달하는 민원의 내용은 경찰에 질의하거나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부분은 ‘고객의 소리’(VOC)의 성격이 다분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4~5만 건의 질의내용과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민원업무 중에 ‘고객의 소리’가 섞여서 접수되고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민원으로 접수된 고객의 소리는 각 채널별로 마무리 한 후 후속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일반 발급민원과 달리 ‘고객의 소리’는 경찰서비스에 대해 기대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소중한 ‘정책자원’임에도 이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현재 처리하는 방식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객의 소리(VOC)’의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제안하면, 첫째, 고객의 소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민원 속에 들어있는 고객의 소리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182콜센터’, ‘국민신문고’, 경찰서 홈페이지 및 경찰청(서)의 민원실에 분산 접수되어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고객의 소리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객의 소리’에 관해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일선에서는 채널별로 수집된 정보자료가 정기적으로 지휘부에 보고, 분석 및 체계화, 시정,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현재 ‘고객의 소리’ 운영시스템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지만, ‘고객의 소리(VOC)’에 관한 중요성에 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되기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고객의 소리에 관한 정보는 치안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정책자료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자료, 내부구성원의 교육자료, 대국회 입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SI



탈북자 사회일탈 유형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소실 책임연구원 김 윤 영

들어가는 말

2013년 11월말 현재 26,028명의 탈북자들이 입국하였다. 신변보호경찰관서는 하나원에서 12주의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정착지에 편입한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함께 ‘보안협력위원회’ 및 ‘신상상담관’ 운영,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한 취업지원활동’ 등을 통해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 교육, 한가족 결연, 법률 및 생활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의 증가와 함께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해외 위장망명, 범죄와 범죄피해 등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들의 사회적 정착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일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되면서 치안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탈북자들의 사회일탈 유형과 대책방안을 간략히 제언하고자 한다.

탈북자 사회일탈 유형

첫째, 탈북자들은 우리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정부가 지급한 정착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정착금마저도 본인 및 가족들의 국내입국 경비를 비롯해 사기와 투자 실패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마약범죄, 보험범죄, 문서 위변조, 절도, 사기, 폭행, 성매매 등의 범죄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외에도 먼저 정착한 탈북자가 사기브로커와 연계하여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 탈북자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사업투자, 고수익 보장투자,

부동산, 보험, 다단계 등과 관련한 금융 사기 범죄를 자행한다.

둘째, 해외위장 망명 탈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내정착 탈북자들 가운데 국내입국 전 꿈꾸던 남한생활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감 등을 이유로 해외 이민은 물론 ‘위장 망명’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 위장 망명 브로커들의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되어 ‘탈북-국내 정착-위장 망명’까지 기획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해외 탈북난민 155명 중에서, 해외위장 망명 탈북자는 2009년 15명, 2010년 9명, 2011년 10명, 2012년 41명, 2013년 9월 현재 51명 등 12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2013 국정감사 자료).

셋째,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은 탈북자 중 정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대남 공작원으로 포섭한 후 탈북자로 위장시켜 합법적으로 남파시키고 있다. 이들은 국가기밀 탐지, 특정인사 암살, 탈북자의 복송 및 재입북 유도, 위장귀순 후 지령대기, 탈북자 동향 파악, 재중 국가정보원 직원 파악, 남한침투 공작원과의 연계, 위폐전환, 재미교포 유인, 무장간첩 소재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10년간 공안당국은 총 49명의 북한 간첩을 적발하여 구속했는데, 이중 42%인 21명이 위장탈북자 간첩으로 확인되었다(2013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넷째, 최근 북한은 인터넷 망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재입국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정착 탈북자 중에서 북한당국의 회유와 협박, 사회 부적응,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걱정 등의 사유로 재입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일부는 2013년 9월 현재 재입북 탈북자를 13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이러한 숫자는 북한 언론매체에 등장해 재입북 사실을 공개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장탈북자 간첩이 우리사회 부적응 탈북자들에게 접근하여 재입북 회유와 협박할 경우 탈북자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탈북자 사회일탈 대책

첫째, 탈북자들의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신변보호경찰관서는 ‘생활법률 매뉴얼’과 ‘범죄예방 매뉴얼’로 제작하여, 신변보호대상자와 접촉시 배포하거나 신변안전 및 안보교육시 배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전문상담사 자격을 가진 보안경찰관을 신변보호경찰관으로 배치하여 탈북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탈북자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치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치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 집단거주지 정착 탈북자들과 치안간담회를 통해 전과자나 우범자 및 피해자, 악덕업주에 의한 임금체불 등 소외된 탈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탈북자에 대한 재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탈북자가 합동신문조사기관에서 1차적 신문과정을 거친 후 신변보호경찰관이 일정기간 거주지 신변보호를 하고 있지만, 1차적 검증시스템과 신변보호기간을 통과한 위장탈북자 간첩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국내활동을 할 수 있다. 재검증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가안보는 국가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외에도 탈북자 중 잦은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에 대한 심층 내사로 위장탈북자 간첩을 색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경찰관서는 고위급 인물이나 가족, 지명도가 높은 자, 공작원 출신 등 주요 탈북자에 대한 집중관리체제 방안을 도입하여 신변위해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신변보호경찰관이 파출소나 지구대와 협조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국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탈북이주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모니터링을 통해 탈북자 보복위협 게재물 등을 삭제하거나 침투경로를 추적하여 역 공작 등의 적절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맺는 말

최근 탈북자들의 사회일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지만, 탈북자 단체의 반대와 보안상의 이유로 탈북자 사회일탈 실태와 관련한 통계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의 사회일탈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물론 대응책 제시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탈북자들의 사회일탈 실태가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그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운운하는 불만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제는 탈북자들의 사회일탈 원인과 실태에 대한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탈북자의 지원정책이 특혜문제로 비하되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PSI**

북한의 강성대국 추진에 대응한 보안경찰의 강화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송 경 호

들어가는 말

현 시기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담론’ 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이 ‘강성대국 건설론’이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강성대국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사상·정치·군사강국은 달성하였고 경제대국만 건설하면 강성대국을 완성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민통제 강화 및 선군정치를 통한 무력 증강, 전투태세 강화, 후계체제 공고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아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통한 외부지원을 모색하고 남·북 관계와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 사망 이후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을 해소하고 민심이완 결집, 새로운 국제 환경 변화의 대처방안으로 ‘강성대국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본 연구는 북한이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제시한 강성대국 추진실태를 분석 평가하고 보안경찰의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강성대국 추진방식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국민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그들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

설에 눈부신 비약 일으켜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원칙으로는 우리식원칙, 자력갱생의 원칙, 실리주의원칙을 제시하고 경제논리의 핵심적 방향은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 강화, 실리보장·경제 관리 개선 및 실리를 내세웠다.

강성대국의 추진방식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과 ‘총진격운동’을 제시하였다. 제2 천리마운동은 2009년부터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생산성 증산 효과를 꾀하여 왔다.

강성대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은 당의 영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전당·전체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 총진격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리수령, 우리사상, 우리군대, 우리제도 제일주의 구호를 제시하였다.

강성대국 추진실태

북한은 1천억 달러(약 110조원)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농업 및 국가 기간사업을 육성을 목표를 설정하고 2011년에는 국가경제발전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의 대표적 성과는 주체 섬유(2.8비날론연합기업소), 주체 철(김책제철연합기업소), 주체 비료(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대게도 간척지공사,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및 3월 5일 청년광산 현대화, 평양시 주택 10만 세대건설, 핵융합 성공, 축포 국산화, 인민생활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사상분야에서는 사회주의 유일 지배체제,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내세워 내부적으로는 권력세습, 민심수습, 체제위기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내부의 정치사상적 통일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분야에서는 외부의 지원 없이 기습할 수 있는 전투능력과 외부의 군사적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에 선진국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력 확보 및 전민중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강성대국 건설에는 많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격개생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점

강성대국의 개념 정의에 있어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강성대국이 될 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만이 강성대국 될 수 있다는 억지의 논리를 펴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강성대국 건설은 내부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체제안정화 목적의 국가 전략으로 강성대국의 궁극적 목적은 전한반도의 사회주의 공산화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혁명 전략이라는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선진국 진입을 언급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으며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공장·기업소의 정상화

가 실현되었지만 부족한 전기·자재, 수송 지연 등 언제 가동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식량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전략무기에서 대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화,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안경찰의 강화방안

첫째는 보안경찰의 조직역량을 강화시키고 안보의식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축소된 보안경찰 조직을 원래대로 환원조치하고 보안경찰의 재무장, 안보분야 계몽·홍보 강화, 북한 정세분석·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다양한 홍보물 제작 활용, 내실 있는 안보홍보 공모전 등 개최 및 적극 활용, 안보홍보 전담 홈 페이지 개선, 상시적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둘째는 보안경찰의 기본임무인 보안수사 활동 및 보안정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안수사역량을 강화시키고 현재의 보안수사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보안수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강화시키고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한 단계별 매뉴얼 추진, 쟁점별 체계적 분석과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는 보안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전문화시켜 나가야 한다. **PSI**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선임연구원 김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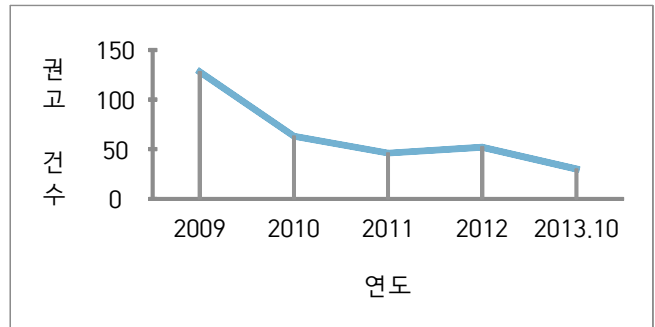
서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활동에 대한 권고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그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경찰장구 사용에 대해서는 부당한 사용이나 권한 남용의 경우 교육에 그치던 권고가 압수압 사용이라는 방법의 변경까지 포함하여 권고된 바 있다. 경찰에서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장구의 개량, 매뉴얼 정비 등을 진행했으나, 경찰활동의 기본이 되는 인권의식 제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구 사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치안 현장에서 인권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환경 형성,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의 변화, 나아가 인권보호와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개선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경찰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현황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6,188건으로 이 가운데 권고 건수는 319건으로 5.2% 비율로 나타났다. 2009년 1,203건, 2010년 1,594건이었던 진정건수는 2011년 이후 400여건 이상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진정건수 대비 권고의 비율도 2009년 128건으로 10.6%의 비율이 2010년 이후로 4.0%대의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

연말에도 권고 건수와 진정 건수는 이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5년간 인권침해 권고 건수의 변화(경찰청, 2013)

2009년부터 2013년 12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상에서 조사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례 148건 가운데 직접적인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 23건의 사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유형은 부당한 수갑 사용으로 기본권 침해, 수갑 찬 모습 비공개 조치 미흡,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신체 피해, 수갑 사용과 폭행·고문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분석내용은 장구사용 절차 규정 준수 미흡, 과도한 업무에 따른 인권보호 의식 소홀, 재량권의 한계 인식 부족,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기준 모호 등을 들 수 있다.

경찰장구 사용과 인권의식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실시한 전문가 그룹 9인 대상의 델파이 분석을 통한 장구 사용과 인권의식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차

개방형 질문지 15개 항목의 질문에 전문가의 응답은 1) 우리 경찰의 인권의식은 높은 편이다. 2) 현장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권의식이 희박해지는 경우도 있다. 3) 경찰권 발동에 대한 시민의 입장은 지지는 하되 자신이 대상이 되면 달라질 수 있다. 4) 인권의식은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5) 장구 사용시 위험성 발생에 대해 가장 중요시 하고, 본질에 맞는 장구를 사용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6) 인권관련 교육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 7) 인권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야 하고, 지속적 노력을 위해 인권센터의 격상이 필요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2차 객관형 질문지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검증되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 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보호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규정의 마련과 절차적 준수의 요청이다. 둘째, 경찰활동과 장구 사용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셋째,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의 재량권을 보장하여 절차 내에서 공정한 범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전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민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인권상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찰의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설문지 분석 결과

전문가 그룹의 견해를 검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인권 심화 교육과정에 참여한 인권 업무 담당자(41명, 응답율 78.8%) 대상 설문지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중 첫째, 장구 사용에 있어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엄격한 절차 준수 규정 준수가 요청, 둘째, 치안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경찰의 인권의식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면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 셋째, 구체적인 경찰 재량권의 보장과 경찰과 시민 사이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인식 차이 극복, 넷째, 인권에 대한 철학적 토대 마련을 위한 연구와 활발한 인권홍보 및 보호 활동 전개, 장기적인 인권센터를 승격 방안 검토와 민원센터 활용 방안 고려 등이 나타났다.

결론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의 방향성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구사용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의 확보 분야에서는 1) 장구 사용에 대한 절차의 엄격한 준수에 따른 충분한 규정의 숙지, 정확한 사례의 매뉴얼 제작, 정기적인 장구 사용 교육, 물리력의 기준 마련을 2) 경찰 재량권의 구체화에서는 추상적으로 산재된 법령의 통합, 재량권에 대한 법령의 구체화, 시민 모니터링제도 실시를 대응방안으로 들었다.

둘째, 인권의식 변화 분야에서는 1) 시민과 경찰의 인권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민과 소통 창구 확대, 시민대상 인권프로그램 운용, 지역 경찰활동으로 시민과 소통을 2) 민원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점점 마련을 위해서는 민원센터의 상담기능 강화, 인권홍보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인권보호 시스템 개선방안 분야에서는 1) 경찰청 인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인권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조사, 권고, 의견 표명의 여건 형성, 내부 인권침해와 진정사태 결정 참여, 인권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를 들었고, 2) 인권센터의 확대 방안을 위해서는 ‘국’ 단위로 조직 승격개편 필요, 충분한 인력과 지원 필요, 경찰 철학 연구 지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분야에서는 1) 인권센터의 소규모 그룹 학습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그룹 인권강의, 표준강의안 자료의 활용, 실습위주, 외부강사 초청, 장구 사용과 인권교육의 병행을 들었다. 2) 상시학습제도의 활용에서는 온라인과 사이버 교육 실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교육성과를 상시학습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들었다.

다섯째, 인권보호 아이디어 개발 분야에서는 1) 인권보호 노력의 성과평가 반영을 위해 직장 내 아이디어 공모 성과평가 반영, 외부 부서의 인식 변화 유도, 직장 내 전문가 양성시 재교육 실시를 2)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지역경찰의 인권교육 참여로 신뢰 형성, 지역사회에 인권 프로그램 운영과 인권지킴이제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인권교육의 경우 현재 다양한 인권의식 제고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인권교육의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이란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비율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사와 생활안전(지역경찰) 분야뿐만 아니라 경비, 교통, 정보, 감찰, 외사 등 법률에 근거를 둔 경찰활동은 모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업무이기에 인권존중이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

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강소영 선임연구관
 편집위원 : 권태형, 이춘삼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 031-620-2374 (경비) 61-2374
 • e-mail : webmaster@psi.go.kr

경찰중간관리자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 조직 구성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경찰연구관 이 춘 삼

연구의 목적

경찰 중간관리자가 처한 현실은 중간관리자의 역할 부재를 넘어서서 경찰 조직 전체의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찰 조직의 중간관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심층 분석하여, 경찰 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조사설계 및 방법

설문은 경찰 조직 내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들의 조직문화, 인사제도, 처우개선 등의 기초적인 인식조사를 위해 설계되었다. 여기서 중간관리자의 범위는 경감 및 경정계급을 중심으로 자기입식 조사를 위해 선정하였고,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병행하기 위해 순경~총경까지의 계급을 대상으로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2013년 4월~5월까지 경찰대학교 경감·경정 기본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 중 각 150명,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순경부터 경위까지의 계급에 대해서는 2013년 4월~5월까지 경찰교육원의 직무교육과정 입교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위관리자계급인 총경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 중 총경계급 4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및 논의

1. 중간관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평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중간관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 중간관리자는 부하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67	3.44	.94
	2 중간관리자는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67	3.58	.82
	3 중간관리자는 믿고 신뢰할 수 있다.	367	3.43	.87
	4 중간관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능력이 있다.	367	3.45	.84
	5 중간관리자는 업무와 무관해서는 좋은 사람이다.	365	3.37	.93
	6 중간관리자는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367	3.60	.90
	7 중간관리자의 경찰청이나 지방청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367	3.52	.85
	8 중간관리자 숫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67	3.05	1.14
항목 평균	367	3.43	.64	

2. 중간관리자의 현재 위상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중간관리자의 현재 위상 등	1 중간관리자는 계급에 걸 맞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372	2.78	.92
	2 중간관리자는 하위 계급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	372	3.38	.90
	3 중간관리자는 상위계급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	372	2.06	.79
	4 중간관리자는 다른 계급보다 직무상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	372	3.62	1.02
	5 중간관리자는 다른 계급보다 조직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372	2.93	.94
	6 중간관리자에 대해 조직 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71	3.12	.91
	7 중간관리자가 처한 현실이 개선되고 있다.	371	2.59	.85
항목 평균	372	2.77	.53	

*항목평균 계산시 역코딩 함.

3. 조직문화와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인식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조직문화에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1 중간관리자에 대한 상급관서의 지시는 적절하다.	368	2.72	.75
	2 중간관리자에 대한 상사의 모욕적 언사나 사적인 업무지시가 있다.*	367	2.97	.90
	3 중간관리자에 대해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368	2.80	.84
	4 중간관리자의 조직 내 경쟁 정도는 적절하다.	368	2.71	.84
	5 중간관리자는 조직 내 소통에서 배제되고 있다.*	368	2.65	.76
	6 중간관리자는 인기에 영합한다.*	368	2.78	.83
	7 중간관리자는 직원 잘못에 대해 부당하게 책임을 진다.*	368	3.24	1.07
	8 무사안일·복지부동한 중간관리자가 있다.*	368	3.41	.91
	9 입직경로별 중간관리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	368	3.54	.96
항목 평균		368	2.85	.42

*항목평균 계산시 역코딩 함.

4. 인사제도와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인식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인사제도에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1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371	2.41	.83
	2 중간관리자의 보직·승진 인사시 연공서열이 고려되고 있다.*	371	3.15	.95
	3 중간관리자의 승진이 지방청·경찰청 등 상급관서에 편중되어 있다.*	371	3.95	.89
	4 중간관리자에 대한 성과평가 등 평가 결과에 공감한다.	370	2.53	.84
	5 중간관리자의 보직 부여·승진 등 인사 과정이 투명하다.	370	2.47	.85
	6 현행 경감급속승진 제도는 바람직하다.	370	2.77	1.32
	7 경쟁 계급정년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370	3.39	1.41
	8 중간관리자의 입직경로의 다양화는 필요하다.	370	3.14	1.34
	9 로스쿨의 경위 또는 경감 특채는 필요하다.	370	2.45	1.34
항목 평균		371	2.67	.50

*항목평균 계산시 역코딩 함.

5. 처우개선과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인식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처우개선에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관련	1 중간관리자의 생활은 만족스럽다.	369	2.71	.79
	2 중간관리자 직급에 합당한 보수 및 처우를 받고 있다.	369	2.50	.92
	3 일선 직원들 중심으로만 수당 등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	369	3.28	1.11
	4 중간관리자에 대해 근무부서에 따른 차별이 있다.*	369	3.55	.82
	5 중간관리자 대상 주기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369	2.66	.81
	6 중간관리자 대상 자기계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369	2.22	.82
항목 평균		369	2.64	.47

*항목평균 계산시 역코딩 함.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대안 제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와 관련한 설문 항목간 비교에 따르면 중간관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장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의 처우개선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간관리자 직급에 합당한 보수 및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당현실화로 인해 일선 직원들보다 월급의 실수령액이 적은 점에 대해서 일종의 자괴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무·생안 등 근무부서의 중간관리자는 정보·보안·수사 등에 비해 수당이 없어 근무부서에 따른 차별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무·생안 등에 대한 기획수당 신설, 여타 부서 근무 중간관리자에 대한 수당 인상 등을 통해 중간관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실질적인 주기적 교육의 실시 및 자기계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계급정년제도 유지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정 퇴직자에 대한 전직 교육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정 계급정년의 폐지가 어렵다면, 경정 계급정년의 2년 연장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로스쿨 휴직제도 및 직무과건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제도와 관련한 중간관리자의 불만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특히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보직 부여, 승진 등 인사과정도 여전히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성과평가 등 평가결과에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서는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감도가 아직까지 높지 않은 점을 인식하여 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진의 경찰청, 지방청 상급관서의 집중 문제가 아주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인원 강제할당의 법제화 등이 도입되어야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직문화에 있어서는 중간관리자에 대한 부당한 책임 전가, 무사안일·복지부동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감독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무사안일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무보직 연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관리자가 상위 계급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은 전 설문항목을 통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바, 조직 내부 문화 개선작업과 아울러 상위 계급의 권한에 대한 중간관리자에 대

한 위임의 정도를 확대하는 등 법적·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하여, 하위 계급의 상위계급에 대한 평가결과의 인사 등의 실질적인 반영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이 땅에 굳게 서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경위 이준형



나는 눈물이 많은 편이다. 가끔 신문기사나 광고문구 하나에도 코끝이 찡할 때가 있다. 누군가는 나이 먹는 징조라고 농담을 하지만 거뭇거뭇한 숨털 수염이 입가에 자라날 무렵부터 그랬기 때문에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게 확실하다. 몇 달 전 경찰의 날 행사장에서 필자는 또 한 번 울컥할 뻔했다. 기념식이 끝날 무렵 여러 동료경찰관과 함께 불렀던 ‘경찰가’ 때문이다.

‘경찰가’는 수도경찰 악대가 만들어졌던 1947년, 경찰을 상징하는 노래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시민을 상대로 가사를 공모하여 당선된 이기완 님의 글에 현제명 선생이 곡을 붙여 만든 노래다. 누가 작사·작곡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60년도 넘게 불리는 노래엔 부를 때마다 가사를 음미하고 되새기게 하는 힘이 담겨 있다. 특히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부르며 “영광과 임무를 어깨에 메고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 하는 마지막 대목에 이르면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메고도 늘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직업이 하늘 아래 몇 개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콧날이 시큰해진다.

경찰은 올해로 68주년을 맞았다. 국립경찰의 창설이 1945년 10월 21일이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1948년 8월 15일)보다 3년이나 앞선 셈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고

또 군대를 제외하면 가장 거대한 조직이 바로 경찰이다.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요구가 크고 막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들로 언론에 십자포화를 맞은 때도 있었고 그로 인해 일부 국민으로부터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순사’라는 일제강점기의 치욕스런 명칭이 여전히 통용되는가 하면 인터넷에서는 ‘짹새’나 ‘민중의 몽둥이’이니 하는 듣기 민망한 비하도 부지기수다.

한해에만도 수십 명의 경찰관이 업무 중에 순직하고 그렇게 온몸을 바쳐 희생한 경찰관들이 창경 이래 13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충직하게 근무하는 경찰이 국민의 광범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조금 성급한 진단일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의 부재’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신의 부재’가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이 경찰을 물리적 집단으로 이해하지만, 오늘날의 경찰을 물리적 집단으로만 한정하기엔 그 활동 영역이 너무나도 넓고 깊다. 경찰의 활동이 사명감과 직업의식 없이 물리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범죄 척결자’로서의 경찰을 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사’,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경찰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경찰이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찰정신부터 되돌아보고 조직을 다독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마땅히 ‘경찰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경찰현장은 1991년 탄생했다.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거듭나던 때다. 그 후로 수많은 경찰청장이 재임하였고 청장마다 지휘지침은 수없이 달라졌지만 정작 경찰정신의 뿌리인 경찰현장은 오래된 고서와 같이 먼지 쌓인 책장 속에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시무식이나 신입경찰관들의 임용식에서 들어볼 수 있을 뿐 많은 경찰관이 현장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경찰정신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바라는 건 정도에 어긋난 것 아닐까.

‘경찰현장’은 경찰관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가진 존재로 규정한다. ‘경찰가’ 제창이 경찰관들의 소속감과 자긍심, 동료애를 자극하여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기제라면, 경찰현장은 외부로 향해 스스로 다짐과 사명을 밝히는 선언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경찰관들은 수시로 경찰현장을 읽고 다짐하며 실천 규범으로 내면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명과 책무를 끊임없이 대외에 천명해야 한다.

시대의 요청을 발 빠르게 수용하고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경찰이 가져야 할 정신적 뿌리는 변치

않는 법이다. 변화의 기로에 선 우리 경찰이 다시 경찰현장에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이유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 “영광과 임무를 어깨에 메고” 당당하고 우직하게 “이 땅에 굳게 선 민주경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PSI**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현장의 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경찰관 중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께서는 학위논문 1부를 보내주시면 치안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과 경찰학 전공 대학생들의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상진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어려운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어 치안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치안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되는 최근의 경향을 볼 때, 경찰학전공 관련 직업에도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학전공 직업계열의 능력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양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업무수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능력 배양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인위적이고 능동적으로 함양시켜야 한다. 따라서 경찰학전공 대학생의 학교생활은 관련기관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발표에 따라 2013년부터 향후 경찰력의 2만명 증원계획은 부족한 경찰인력의 증원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기대가 크다. 하지만 급격한 채용인원의 증가로 자칫 부적격자가 선발되어 경찰의 위상에 손상을 입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경찰학 전공 대학생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이를 반영하듯 각 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서는 2013년 활발한 협약체결로 경찰학 관련학과와 교류를 다짐하고 있으며 경찰청

에서는 지역사회 봉사과 대학생들의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경찰학전공 대학생들과의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으로 학점 연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은 장래에 사회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윤리적 책임의식을 고양할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의 당위성이 날로 더해져 가고 있다. 경찰학전공 관련학과와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자원봉사는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에게 공공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동기부여와 함께 관련 학문의 실무체험을 통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윤리적 시민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훌륭한 교육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학과 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전공관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과(학교)와 교과과정 그리고 경찰학전공 관련기관 등과 함께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과(학교)차원에서의 경찰학전공 관련 활동의 봉사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적인 관리를 통한 정책의 수립이다.

보통의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유관기관과의 인프라는 갖추어졌으나 구체적 관리활동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공관련 활동의

봉사학습이 목표로 하는 교육적·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학과장과 총장을 비롯한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관련활동 참여를 통한 봉사학습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 정책적 지원·관리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의 요구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수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학과)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공 관련 봉사학습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봉사학습 교과과정을 계획함에 있어서 교육적 의미와 전공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기여하는 봉사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로부터 학과(학교)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가 형성 될 때 교육적 성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전공 관련활동 참여의 학점제이다. 경찰학전공과의 대표적인 유관기관은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찰학전공 학과에서는 2010 G20 서울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시 치안인력의 동원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이 합동순찰을 실시하거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배움터지킴이와 같은 범죄예방 활동에 유관기관과의 합동활동으로 전공에 대한 인식과 선호 그리고 전공에 대한 적응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학과(학교)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 형성으로 학생 스스로가 경찰학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관련활동의 참여는 단순히 참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련활동

등의 참여를 통하여 참여활동 일지 작성보고서, 작성 평가회 등 반성적 고찰을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활동 경험이 교육적 성과를 지닐 수 있도록 경험과 학습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를 교과과정의 한 부분으로 교과목을 설정해야 한다.

그 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예비인적 자원인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 개인이 어떻게 경찰직에 입문하기를 희망하며 경찰학전공을 선택하고 경찰직이라는 직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전국에 많은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이 당연히 경찰채용시험에 응시할 것이라 예상하고, 지원하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찰직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직업의식을 고취시켜 경찰직에 대한 적격자가 경찰직에 입문하는 것이 나아가 경찰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여겨진다. [PSI](#)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 ‘치안정책동향’에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한 원고 중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연구소 소식 및 연구관 동정

연구소 소식

◆ 치안전망 2014 발간 자문회의

연구소는 11월 13일~28일 사이에 치안전망 2014 발간을 위한 각 연구실별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은 2014년 1월에 발간될 「치안전망 2014」에 반영될 예정이다.



11월 27일 교통대책연구실 자문회의



11월 27일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자문회의

◆ 치안정책연구소 동계 워크숍

연구소는 12월 5일~6일 강원도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치안정책연구소 동

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 연구논문 발표 및 2013년도 책임연구과제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발간

◆ 연구소는 12월 31일자로 등재학술후보자인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2호를 발간하였다. 게재된 논문은 모두 9편으로 2014년 1월 중 전국 경찰관서 및 경찰관련 학과 개설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며,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연번	논문명	저자
1	방범용 CCTV의 주야간 범죄예방 효과 비교	임형진 이주락
2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법률 제정안 비교분석	김병주
3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방안 고찰	김윤영
4	자치경찰관의 업무특성 요인이 조직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종승 배정환
5	외국의 교통유도업무 운영 실태 및 시사점	신성균 박상진
6	내부고발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박세훈
7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경찰상 정보보호의 입법원리	이성용
8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검증에 관한 제문제	서주연
9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 인식에 관한 연구	홍태경

연구관 동정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11월 6일과 12월 2일에 180기, 181기 경감기본교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12월 24일에 경찰대학 직장교육에서 ‘2014년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강의하였다.

◆ 김지선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11월 26일 경찰청 정책용역과제 ‘치안통계 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결과보고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고, 12월 20일 한국범죄심리학회-동국대 경찰범죄연구소-원광대 경찰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다목적CCTV 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강소영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11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한국피해자지원협회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4대 사회악 범죄피해자 정책의 평가와 과제’ 중 학교폭력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한국범죄심리연구 제9권 3호에 “청소년 문화활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11월 28일 제28기 치안정책과정을 대상으로 ‘범죄학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였다.

◆ 김현숙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11월 8일 경찰대학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전국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12일과 19일 경찰청 4대 사회악 분야 성과평가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평가에 참여하였다. 또한, 12월 17일 및 19일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제4기 경찰형사법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였다.

◆ 이기수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12월 21일 (사)법과 역사학회 국제학술회의 ‘중국형사소송법의 개혁과 발전의 신동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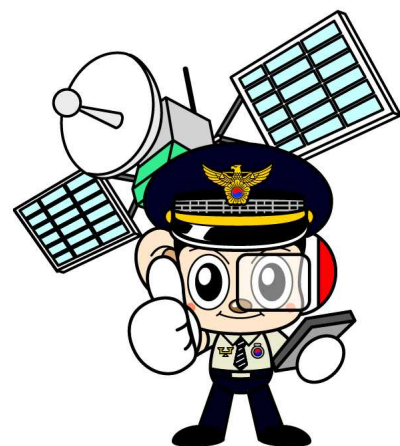
연구소 인사

◆ 12월 19일자로 홍성무 경감(前 경기지방경찰청)이 교통대책연구실에 전입하였다.

◆ 12월 31일자로 조요셉 연구부장과 엄기풍 기획운영계장이 정년퇴직을 하였다. [PSI](#)



연구소 전경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협의 업무

